

국가 탈시설 시범사업 현황과 과제

2022년 7월 29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주제발표 좌장 | 조한진 (대구대학교 장애학과 교수)

사례발표 <탈시설 이후 당사자의 삶의 변화>

신현상 (지원주택 입주장애인)

<재가장애인 가족이 바라보는 탈시설 시범사업의 필요성>

최한숙 (지원주택 입주장애인 가족)

현황발표 <탈시설 로드맵 및 탈시설 시범사업 추진 현황과 과제>

한영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장애인자립추진팀장)

토론 <탈시설 시범사업 선정 지역 현황: 대구>

권수진 (사)장애인지역공동체 탈시설시범사업추진단장

<탈시설 시범사업 선정 지역 현황: 인천>

정재원 (인천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장)

<탈시설시범사업 종합적 검토와 과제>

김기룡 (중부대학교 교수)

<탈시설 시범사업 주택 공급 현황과 과제>

김부병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사무관)

<탈시설 시범사업 현황>

서해정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팀장)

공동주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전국장애인아학협회,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준), 탈시설정책위원회,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사)한국장애포럼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남인순, 김영호, 박찬대, 강민정, 김주영, 문정복, 오영환, 윤영덕, 최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두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식 순

시간	구분	내용
14:00~14:10	개회	<사회> 김필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인사말> - 국회의원 - 장애인 단체
14:10~14:15	소개	<좌장> 조한진 (대구대학교 교수)
14:15~14:35	사례발표	<탈시설 이후 당사자의 삶의 변화> - 신현상 (지원주택 입주장애인) <재가장애인 가족이 바라보는 탈시설 시범사업의 필요성> - 최한숙 (지원주택 입주장애인 가족)
14:35~14:55	현황발표	<탈시설 로드맵 및 탈시설 시범사업 추진 현황과 과제> - 한영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장애인자립추진팀장)
14:55~15:45	토론	<탈시설 시범사업 선정 지역 현황: 대구> - 권수진 (사)장애인지역공동체 탈시설시범사업추진단장 <탈시설 시범사업 선정 지역 현황: 인천> - 정재원 (인천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장) <탈시설 시범사업 종합적 검토와 과제> - 김기룡 (중부대학교 교수) <탈시설 시범사업 주택 공급 현황과 과제> - 김부병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사무관) <탈시설 시범사업 현황> - 서해정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팀장)
15:45~16:15	종합토론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16:15~16:20	폐회	<폐회 및 정리>

▶수어통역: 윤남, 박미애

목 차

인 사 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7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0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2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4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6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8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2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4
	김예지	국민의힘 국회의원 26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28
	권달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30
	사례발표	신현상	지원주택 입주장애인
최한숙		지원주택 입주장애인 가족 38
발 제	한영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장애인자립추진팀 팀장 46
토 론	권수진	(사)장애인지역공동체 탈시설시범사업추진단장 62
	정재원	인천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장 77
	김기룡	중부대학교 교수 83
	김부병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사무관 89
	서해정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팀장 90

인 사 말

인 사 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남인순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병 남인순 국회의원입니다.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발표 1주년을 맞아 ‘국가 탈시설 시범사업 현황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함께해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해주신 더불어민주당 강민정·김영호·김주영·문정복·박찬대·오영환·윤영덕·최혜영 의원님, 정의당 장혜영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공동으로 주관해주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두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준),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사)한국장애포럼, 탈시설정책위원회 관계자 여러분에게 연대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좌장을 맡으신 조한진 대구대학교 장애학과 교수님, 발제해주실 한영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장애인자립추진팀장님, 토론을 맡아주실 권수진 (사)장애인지역공동체 탈시설시범사업추진단장님, 정재원 인천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장님, 김기룡 중부대학교 교수님, 김부병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사무관님, 서해정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사례발표에 나서주신 지원주택 입주장애인 신현상님과 지원주택 입주장애인 가족 최한숙님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해 8월 2일, 정부가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상 아쉬움이 있지만, 중앙정부가 정부의 탈시설 의지를 최초로 선언하였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광역·기초지자체 10곳에서 1년에 20명씩, 3년간 총 600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탈시설 시범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개인별 특성과 요구, 지역사회의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자체별로 각각 특성에 맞는 탈시설 계획을 수립해 장애인 자립지원의 기틀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한편, 성공적인 탈시설 지원을 위해서는 충분한 인프라와 재원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전문인력이 적정하게 배치되어야 하고, 안정적인 주거 공급과 장애인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시범사업의 진행 상황을 함께 점검하고, 부족한 점을 찾아 대안을 모색하는 협력의 장으로 역할하길 소망합니다.

누구나 자유와 인권을 보장받으며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난달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국회와 중앙정부의 차례입니다. 「탈시설지원법」 등 법적 근거 마련과 충분한 예산 확보로 탈시설 시범사업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복, 평화를 기원합니다.

2022년 7월 29일

남인순

인 사 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영호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 을 국회의원 김영호입니다.

오늘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1주년 기념 토론회'를 찾아주신 많은 내외 귀빈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주신 조한진 대구대학교 장애학과 교수님을 비롯하여 발제 및 토론에 기여해 주신 모든 패널 분들과 특별히 사례발표를 해주실 신현상, 최한숙님, 그리고 행사 진행을 책임져 주관해 주신 여러 장애인 단체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귀중한 자리를 함께 마련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김주영, 남인순, 문정복, 박찬대, 오영환, 윤영덕, 최혜영 의원님, 그리고 정의당 장혜영 의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지나며, 재난은 약자에게 더욱 가혹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시행으로 돌봄 서비스의 사각지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결과적으로 장애인은 더욱 고립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고통을 겪으며 장애인들의 삶의 만족도가 더욱 크게 감소한 것은 여러 통계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국 곳곳의 장애인 수용시설에서 집단감염이라는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면서 오늘의 주제인 장애인 탈시설의 중요, 시급성에 대해서도 다시금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정책이 거주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되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미 미국, 유럽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공동생활 가정과 같은 소규모 시설조차도 생략하고, 독립 주거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탈시설 공동 기준을 마련하여, 시설 지원을 중단하고 지역 사회 기반 서비스 구축을 앞다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도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했고, 그 일환으로 올해부터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부족한 예산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과 시범사업을 뒷받침할 지원체계의 부재 등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순 없겠지만, 모든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그 첫 단추가 바로 장애인 탈시설에 대한 빈틈없는 지원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법, 제도의 확립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탈시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열리는 이 토론회가 더욱 뜻깊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장애인 탈시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함은 물론, 탈시설 로드맵 및 시작 단계인 시범사업의 진행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향후 보완 과제를 두루 살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의 혜안이 모여, 보다 완성도 높은 탈시설 정책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 역시 앞으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습니다. 뜻을 같이하는 많은 의원님들과 함께 입법과 예산으로 탈시설 정책을 빈틈없이 뒷받침하겠습니다. 장애인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끝까지 손을 맞잡고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7월 29일
김영호

인 사 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찬대

국가 탈시설 시범사업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구 갑 국회의원 박찬대입니다.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사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최혜영 의원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준),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사)한국장애포럼, 탈시설정책위원회, 두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올해부터 실시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진행 경과를 살펴보고 개선점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자 마련됐습니다. 장애인과 더불어 잘사는 사회로 가기 위한 좋은 기회가 마련된 것 같아 기쁜 마음입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우리 헌법이 명시하고 있듯이 탈시설도 장애 당사자의 기본권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 더 많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합니다. 오늘과 같은 자리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고견이 오고 가고, 더 연구되고 보완된다면 더 나은

결실이 맺어질 것입니다. 저도 주시는 말씀을 세심히 듣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자리가 더 나은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초석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1주년 기념 토론회 국가 탈시설 시범사업 현황과 과제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7월 29일
박찬대

인 사 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민정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민정입니다.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삶에서의 자기결정권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은 자립하여 살며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씻고, 화장실에 가는 등 일상생활을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기본권 중 기본권입니다. 하지만, 시설에서 살아가는 장애인들은 그 권리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시설에서 살아온 수많은 장애인은 시설에서의 삶은 그 모든 자기결정권을 빼앗긴 감옥에서의 삶이었다고 말합니다.

탈시설은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빼앗긴 삶에서의 자기결정권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우리 사회는 당연히 그 과정을 지원해야 하며, 이를 위해 마련한 것이 정부의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입니다.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의 수립은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국가 정책이 시설 수용 위주 정책에서 탈시설 위주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정책 전환의 첫걸음인 만큼 내용적인 측면에서나 예산지원 측면에서나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은 ‘시설폐쇄’와 ‘시설화 요인 제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은 시설장애인의 퇴소의사를 묻고, 퇴소의사가 있는 장애인에 한해서만 탈시설 지원이 이뤄집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시범사업이 이뤄지고 본격적인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사업들이 진행되에도 불구하고 올해 탈시설 관련 예산은 총 24억 원일 뿐입니다. 열악한 예산으로 인해 2024년까지 3년

간 총 600여 명의 장애인만이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삶에서의 자기결정권을 갖고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에 대한 보완과 이행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1주년을 맞이하여 시범사업 진행 경과와 보완이 필요한 과제를 두루 살피고, 완성도 높은 탈시설 정책 마련을 위해 범부처 협력을 도모하려는 이번 토론회는 무척이나 소중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해 애쓰시고 이렇게 뜻깊은 토론회를 주최하신 최혜영 의원님과 토론회를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이 장애인의 당연한 삶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개선되어 나가길 바랍니다. 저도 그 변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7월 29일
강민정

인 사 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주영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국회의원 김주영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탈시설 시범사업 현황과 과제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해주신 최혜영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님,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님, 김유현 두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오늘 행사에 좌장과 발제,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분들을 비롯해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럽·미국 등 외국에서는 이미 60년대부터 지역사회 중심의 탈시설 및 자립정책을 진행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 발전·성장을 거치는 과정에서 거주시설 장애인이 처한 인권 침해적 상황 개선 노력이나 장애인 개개인의 성장,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 대한 고려 없이 민간시설을 지원하는 정책 위주로 시행해 왔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했으나, 중앙탈시설 지원센터 운영 예산 3억, 시범사업 국비 예산이 21억에 불과한 실정으로 재정적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더욱이 편의 접근이 보장된 주택 확보와 중증·발달 장애인을 위한 지원체계의 부재 등으로 시범사업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탈시설 지원정책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효과적인 지원체계와 자원 조달 방법 마련을 위한 법·제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의 문제점과 한계를 짚어내고, 당사자분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의견들이 어우러지는 깊은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 또한 행사에서 제안되는 대안들을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내외귀빈을 비롯한 전문가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7월 29일

김주영

인 사 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문정복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시흥갑 국회의원 문정복입니다.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1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뜻깊은 자리를 함께 마련해주신 장애인 단체들과 의원님들께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집단수용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지역공동체로부터 소외되고, 거주지 선택의 기회마저 누리지 못한 채 어렵게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아울러 시설 내 사생활 침해와 학대, 코로나19 집단감염 노출 등 장애인의 독립적 생활공간 부재는 대한민국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성을 상기시키며, 국가기관의 주요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시설 장애인에 대한 자립지원 방안인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이 발표되면서, 국가 차원에서 시설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제도적 지원이 본격화되었습니다.

특히 탈시설 정책으로 시행된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지역 재정과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시범모델로 거듭나며 장애인, 시민, 사회를 긴밀히 연결하는 창구역할을 도모해왔습니다.

장애인 탈시설의 핵심은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융합과 불평등 해소입니다. 이를 기치로 삼아 오늘 토론회는 그간의 장애인 탈시설 정책의 성과를 진단하고 향후 개

선 방안에 대한 소중한 의견들이 개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시된 고견을 깊이 경청하고 제도적 지원 마련에 함께 고민하며,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의 성공적인 도약을 이끌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1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장애인의 독립적인 삶과 더욱 밝은 미래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7월 29일

문정복

인사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오영환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 국회의원 오영환입니다.

먼저,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1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회 내에서 장애인 권리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노력해주시는 최혜영 의원님을 비롯해 토론회 개최에 함께해주신 12개 단체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5년, 문재인 정부는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왔습니다. **중증 장애인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복지서비스의 지원범위와 혜택의 폭을 넓히며, 장애인 돌봄의 국가적 책임을 줄곧 강조해왔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와 공존하며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장애인의 주거결정권 보장과 지역 내 독립생활 지원을 위한 국가 주도의 탈시설 정책 청사진을 제시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희망이 담긴 청사진이 우리의 당연한 일상이 되고, 장애인이 진정한 의미의 자립적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2024년까지의 시범사업 기간이 중요할 것입니다. 탈시설로 인한 돌봄 공백과 지원체계의 재정적 어려움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토론회가 그 중대한 과정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탈시설의 구체적 사례를 통해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간다면, 마침내 모두가 동등한 기본권을 누리며 어울리는, 우리가 지향해온 사회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토론회에 함께해주신 탈시설 정책 당사자분들과 대구대학교 조한진 교수님,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연윤실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패널분들께 감사드리며, 탈시설 로드맵의 완전한 실현을 위한 구체적 대안 마련과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장애인권리보장팀 소속 의원으로서 관계부처와 긴밀히 소통하며 제도 및 입법 지원에 더욱더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7월 29일

오영환

인 사 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영덕

안녕하십니까? 광주 동구남구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영덕입니다.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1주년 기념 토론회’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토론회 좌장을 맡아주신 조한진 대구대학교 교수님, 발제해주실 한영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장애인자립추진팀장님을 비롯한 토론자 그리고 패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탈시설 장애인 자립 지원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장애인이 ‘거주시설’을 벗어나서, ‘지역사회’에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비장애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주거공간 지원 정책과 제도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충분한 지원인력의 배치와 공공임대주택 우선 제공 등 주거 지원 시행계획을 구체화하고 실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오랫동안 보장받지 못했던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제 탈시설 지원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탈시설 로드맵과 시범사업의 진행 결과를 살피고 평가하는 토론회가 매우 뜻깊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탈시설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련 부처와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장애인들의 당연한 권리가 무시되어 왔습니다. 그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투쟁해 오신 모든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도 국회의원으로 장애인들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1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7월 29일
윤영덕

인 사 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혜영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혜영입니다.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1주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의 토론회에는 탈시설 당사자와 가족분들이 직접 국회를 방문해 주신 만큼 더욱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주신 남인순, 김영호, 박찬대, 강민정, 김주영, 문정복, 오영환, 윤영덕, 장혜영 의원님, 그리고 공동주관·주최 단체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정부가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정부 역사상 처음으로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을 기존의 시설 중심에서 탈시설·지역사회 자립 지원으로의 대전환을 선언한 것입니다.

탈시설에 관한 정의나, 지원 대상의 한정성, 구체적 지원체계 부재 등의 미비점이 과제로 남아있는 가운데, 올해 국가 탈시설 시범사업이 첫걸음을 뗐습니다.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전주, 경주, 충남, 화순, 제주 10개 지자체에서 20명씩 총 200명에 대한 지원으로 시작해서 3년간 총 600명을 지원하는 계획입니다.

장애인의 탈시설을 위해서는 편의접근이 보장된 주택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그동안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설계되어온 국가의 주택공급 정책이 본 시범사업을 계기로 장애인을 비롯한 주거약자를 고려하는 섬세함이 더해져야 할 것입니다.

탈시설 이후 당사자에 대한 삶의 지원 또한 가족이 아닌 국가의 주도적인 움직임과 정책의 강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에서 충분한 지원을 통해 지역 사회 정착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재가장애인의 시설입소 방지 정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지원인력의 배치와 활동지원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보장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자리는 탈시설 로드맵과 시범사업의 진행 경과를 살피고 향후 보완이 필요한 과제를 점검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장애인자립추진팀 한영규 팀장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김부병 사무관님,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서해정 팀장님 참석해 주신 만큼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기대합니다.

시범사업 현장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권수진 탈시설시범사업추진단장님, 정재원 센터장님, 그리고 플로어에 참석해 주신 각 지자체 담당자분들께 지지와 응원을 보냅니다. 좌장으로서는 내용을 균형 있게 짚어주실 조한진 교수님, 현장 학자로서 총괄 토론을 맡아주신 김기룡 교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신 탈시설 당사자 신현상 님, 장애자녀와 가족이 각각의 개인으로서 존엄할 수 있는 방법을 몸소 실천하고 계신 최한숙 님 두 분께 특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자체가 탈시설의 필요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탈시설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우리 국회가 「탈시설 지원법」 통과로 현장에 화답할 수 있도록 저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1주년 기념 토론회>를 위해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지역사회에서의 존엄한 삶에 있어 단 한 사람도 배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7월 29일
최혜영

인 사 말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예지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예지입니다.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1주년 기념 토론회의 개최를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가 탈시설 시범사업 현황과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가 2008년 비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에 따르면,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선택권을 갖고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촉진하도록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정부는 약 1년 전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해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만 진행되어 지역 간 편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국비 예산은 21억 원 수준으로 전국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턱무니없이 적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열리는 오늘의 토론회는 지난 1년간의 탈시설 시범사업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를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동료 장애인이자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지원을 위한 입법적·정책적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분들과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7월 29일

김예지

인 사 말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지난해 8월 2일 문재인정부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탈시설’ 정책이 대통령 임기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야 그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문재인정부 첫 보건복지부 장관이 광화문 지하도 농성장에 찾아와 ‘장애인수용시설 폐지 민관협의체’ 구성을 약속했던 그 여름으로부터 4년이나 흐른 시점이었습니다. 그 사이 장애인거주시설에서는 계속해서 인권침해와 사망사건이 이어졌고, 돌봄의 책임은 여전히 개인과 가족에게 떠넘겨져 거주시설 입소를 강요받아야 했습니다.

‘탈시설’은 법적 혹은 정책적 개념이기 이전에 장애를 가진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유로운 삶을 위한 토대입니다. 장애를 가진 시민도 동료시민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지역사회로부터 격리되지 않고 한 사람의 존엄한 개인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탈시설’이 권리인 이유는 너무나도 자명하며 국제사회에서도 UN장애인권리협약을 통해 그 원칙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2020년 세계인권선언일에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이, 그리고 지난해에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로드맵을 비롯해 ‘탈시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책적 노력은 여전히 부족하기만 합니다. ‘탈시설’은 시설 중심의 국가 정책에 대한 반성이자 정책적 대전환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장애인 정책의 일부로만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아니라 마치 시설 밖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자 자립할 ‘능력’이 있는 사람만 나오는 문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의 안일한 태도가

‘탈시설’에 대한 왜곡과 논란을 부추기고 있으며, 국가의 책임은 온데간데 없이 장애인 가족 간의 찬반 논쟁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년여간의 시범사업을 돌아보고 평가하는 오늘의 토론회가 매우 뜻깊고 의미있게 느껴집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범사업 예산으로 인해 사업 자체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기는 어렵겠으나, ‘탈시설’ 정책은 이미 지자체 사업을 통해 충분히 확인되어 왔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 로드맵에서 미비한 점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시범사업이 아니라 본사업으로 하루 속히 전환해 ‘탈시설’ 권리 실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소중한 사례를 발표해주실 신현상 님과 최한숙 님에게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정부의 정책 추진 현황에 대해 발표를 맡아주신 한영규 팀장님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범사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해주실 권수진 단장님과 정재원 센터장님께 감사드리며, 정책적 토론을 해주실 김기룡 교수님과 김부병 사무관님, 그리고 서해정 팀장님에게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논의된 다양한 과제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애를 가진 시민의 존엄한 삶을 위해 저와 정의당은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7월 29일
장혜영

인 사 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권달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권달주입니다.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1주년 기념 토론회 : 국가 탈시설 시범사업 현황과 과제」를 함께 주최해주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김영호, 박찬대, 강민정, 김주영, 문정복, 오영환, 윤영덕, 최혜영 의원님, 정의당 장혜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토론회를 함께 주최·주관해주신 장애계 단체들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21년 8월 2일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너무나 늦었고 부족한 내용도 많았기 때문에 장애계는 ‘탈시설 로드맵’에 대한 아쉬움이 큼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9년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된 이후, 32년 동안 유지되어 온 거주시설 중심의 장애인복지가 개인별 지원체계 중심으로 탈바꿈하는 중요한 전환이었다고 평가합니다.

부족하나마 탈시설 로드맵의 일환으로 올해 2022년부터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 시작되었지만, 탈시설 로드맵에서 부족한 내용들이 시범사업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어 우려가 많습니다. 시설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셨던 분들이 지역사회로 정착할 때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이에 범부처적인 정책 수립과 예산 수반이 필연적입니다. 안정적인 주거 공간과 주거를 유지할 수 있는 지원인력이 적절하게 배치되어야 하며, 실질적인 개인별 지원체계가 가능하려면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는 기본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2년 시범사업 예산은 21억에 불과하여 탈시설 한 장애인 당사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정착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특히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 재정당국과 국민들에게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산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예산이 없다면 기본적인 인프라가 확보되지 않음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탈시설(Deinstitutionalization)’은 이미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도 인정한 중요한 권리입니다. 거스를 수 없는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부족한 정책과 재정 여건으로 인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그것이 마치 탈시설을 반대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탈시설 한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 누구도 탈시설에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장애인 부모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잘 귀담아 듣고 탈시설을 통해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애써주셨으면 합니다.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1주년 기념 토론회 : 국가 탈시설 시범사업 현황과 과제」를 통해 장애인의 자유롭고 존엄한 삶을 위하여 정부, 국회, 장애계가 뜻을 모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2년 7월 29일
권달주

사 례 발 표

사례발표: 내가 일해서 돈 모아서 이사 온거야, 자주 놀러와

신현상 || 지원주택 입주장애인

Q. 현상 씨가 탈시설 하기 전 시설에 있을 땐 어떻게 지냈나요?

나만의 방과 시간이 없었다.

다른 친구들이 내 물건을 만지고 간식을 빼앗아 갈 때마다
화가 나고 짜증나서 소리 지르고, 많이 싸우기도 했다.

시설 안에서 내 여가 시간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다.

내가 TV보는 것을 방해하고 원치 않게 말을 걸어와서 방해가 됐다 .

내 방이 없고 주위가 소란스러워서

내가 좋아하는 음악, 그림 그리기를 하기 힘들었다.

내가 먹고 싶을 때 식사를 할 수 없어서 불편했고

메뉴도 정해져서 나오니까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나도 나가서 혼자 살고 싶다고 말했다.

Q. 그러면 현상 씨 탈시설 후 지금 지내는 건 어때요?

처음 이사 왔을 때 내 방이 있고, 침대도 있고, 내 TV도 있고,

세탁기가 있고, 화장실도 있고, 주방이 있어서 기분이 정말 좋았다.

이사하는 날 엄마가 왔는데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다.” 는 말을 하시면서 우셨다.

나는 엄마에게 “내가 일해서 돈 모아서 이사 온 거야, 자주 놀러와.” 라고 말했다.

엄마가 나를 꼭 안아주셨다.

이젠 일어나고 싶을 때 혼자서 일어나, 보고 싶은 TV를 보고,
잠자고, 식사하는 것이 좋고, 목욕하고 싶을 때 목욕하고,
운동도 하고, 에어컨도 시원하고 누군가에 간섭을 받지 않고 살 수 있어서 좋다.

식사 메뉴를 고를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을 때 그림도 그리고,
드라이브도 하고, 외식도 하고, 여행을 갈 수 있고, 내가 나가고 싶을 때,
놀고 싶을 때, 다른 사람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서 좋다.

지금은 일하면서 돈도 벌고*, 소파도 사고,
비데도 사고, 옷도 사고, 먹고 싶은 것도 사고 좋다.
*서울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주4일 15시간

부모님이 우리 집에 놀러 올 수 있어서 좋다.
가끔 엄마가 오실 때 맛있는 것을 해 오시고 저녁까지 있다 가신다.
자고 가면 좋은데 아빠가 아프고 동생(나처럼 장애가 있다)이 있어 집에 가야 한다.
아빠가 한 번 오셨는데 기분이 좋았다. 자주 오시면 좋겠다.

조금만 아파도 집 앞 병원도 바로 가고,
코로나에 걸렸을 때 많이 힘들었는데 사람들이 걱정해 주고 잘 도와줘 좋았다*.
*지원주택 코디가 코로나19 대응 체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서울의료원에 약 2주간 입원 후 퇴원

Q. 앞으로는 어떻게 지내고 싶어요?

아프지 않고 일하면서, 노래, 그림, 운동, 여행, 음악을 계속하고 싶다.
장애인 콜택시가 안 되어서* 이동이 불편한데 나도 탈 수 있으면 좋겠다.
*현재 특별교통수단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심한장애인만 가능

지금처럼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즐겁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다.

사례발표: 발달장애인도 살던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다는 희망이 가족을 살립니다

최한숙 || 지원주택 입주장애인 가족

안녕하세요. 저는 37세 자폐성 발달장애 자녀를 지역에 자립시킨 이동희 엄마 최한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저의 자녀는 자폐성 발달장애 중증 (장애등급1급)입니다. 동희가 어릴 때 저희 가정은 주말부부였습니다. 자연스럽게 동희는 오로지 제가 혼자 돌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힘들어 저는 신우신염, 신장병 앓았습니다. 입원도 수시로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장투석 전 단계로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현재도 건강을 잘 유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부모 사후를 생각하면 늘 아들 동희가 걱정이었습니다.

동희는 형이 있습니다. 결혼 적령기가 되어도 결혼할 생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동희를 책임지기 위해 결혼을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건강만 잘 지키시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부모를 더 아프게 한다는 것을 우리 부모는 모두 알 것입니다. 큰아들에게 동생을 책임 지우는지 않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부모인 내가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정보를 더욱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다니는 교회 장애인 부서 부모들과 함께 서울과 경기도의 그룹홈을 거의 탐방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렇다 할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2017년 서울시가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의 정책제안으로 중증장애인 주거 지원 시범사업이 생겼습니다. ‘자립 체험홈’ 이 양천구에 생겼습니다. 이 사업은 충청복지관에 위탁 실시되었습니다. 우린 2018년 이 사업 설명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강동구에 집을 마련하면 자립 지원이 가능한지를 상담하였고, 가능하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애1급 자녀 3명이 함께 자립하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절박한 사정이 있던 터라 빠르게 속히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저희 가정은 시간이 갈수록 저의 건강 악화와 큰아들의 결혼 포기가 동희의 시급한 자립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저희처럼 자녀의 자립을 시도한 지인 가족 중에

는 이미 엄마가 자녀를 보살필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안 좋아 시설에 1년 정도 맡긴 적이 있는데 자녀에게 안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한 가정은 사업하던 아버지가 건강이 나빠져 사업을 접으시고 장애 자녀의 앞날이 걱정되어 부모 사후를 대비한 자녀의 생활 처를 알아보는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절박한 이유로 모인 우리 세 가정은 지역에 자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생활이 여유롭지 못한 저희 가정은 경제적으로 자립을 시킬 자금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집을 마련할 돈 준비가 안 된 우리는 주위의 도움으로 자녀의 자립 주택을 함께 얻을 수 있었습니다.

2018년 12월 3일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자녀의 자립홈 입주를 축하하는 예배를 드린 날입니다. 예배에 손님이 많이 오시니까 자녀들이 좋아서 박수치며 기뻐하였습니다. 자립의 뜻을 아는지 모르는지 좋아만 했습니다. 부모도 자녀처럼 기쁘면서도 처음해 보는 자립이라 걱정도 많았습니다. 처음으로 자녀를 떼어 놓은 우리는 밤에 자녀들이 잘 잘 것인지 밥은 잘 먹을지 아프지는 않을지 모든 것이 불안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동회와 떨어져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부모와 함께 살 때는 모든 것을 엄마가 해주니까 자녀가 해볼 기회가 없어 못 하는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로 반찬 뚜껑을 잘 닫지 못하더니 주거코치가 시범을 몇 번 보이니 너무 잘하였습니다. 식사시간이 되면 수저를 식탁에 갖다 놓고 각자가 먹을 밥을 푸는 것이 자연스럽게 하였습니다, 본인이 입을 옷은 각자가 챙기는 모습은 정말 기특했습니다.

이렇게 경험하며 자립인으로 성장하는 자녀를 보며 느낀 것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걱정으로 숙식을 주거코치가 자녀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2년이 지나니 부모들 스스로 주거코치의 야간 숙박은 필요 없겠다는 판단이 들어 자녀들끼리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주거코치가 퇴근하고 나면 나름대로 시간을 잘 보내고 있었습니다. 주거코치가 없는 시간 자녀들은 성경 쓰기와 그림 그리기도 하고 TV를 보기도 하고 음악을 듣기도 하며 저녁 시간을 안전하고 평화롭게 즐겼습니다.

자녀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우리 부모들은 발달장애인도 자립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사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계약 기간 2년이 지나 자립홈을 옮길 때 이사 3일 만에 장애인이 살 거라는 것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제퇴거’ 이사를 다시 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부모는 자녀의 장애가 안타까운 마음에 무엇이든지 다 해주는 것으로 자녀의 자립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발달장애 자녀 스스로 해보는 것이 많을수록 자립 할 수 있고 자녀 스스로 결정하는 일이 많아지고 지원의 폭이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처음에는 셋이 같이 있던 자립주택에서 한 분은 부모와 조금 더 시간을 보내고 혼자 자립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집으로 돌아가고 둘이 남았습니다. 둘은 형제같이 잘 지냈습니다.

그러나 두 자녀의 습관이나 습성이 달라서 힘든 점을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늦게까지 TV 보기를 즐기는 자녀와 9시만 되면 잠자리에 드는 자녀의 특성들이 서로 달랐고, 식성이 좋은 자녀와 소식을 즐기는 자녀의 식습관으로 모두가 식성이 좋은 자녀처럼 먹기를 지원하는 것은 또 다른 당사자에게 힘든 점이 되었습니다. 또 주거지가 안정되지 않는 점도 문제였습니다. 상가주택이라 음식점에서 올라오는 냄새와 술 드신 분들이 1층 화장실을 이용하며 우리 당사자들과 부딪치는 점 등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21년 1차 지원주택 신청과 21년도 2차 지원주택 신청으로 4년 전에 지역에 자립한 당사자는 모두 주거지원으로 아파트와 주택을 분양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정말 좋은 케이스입니다. 많은 부모님이 자녀가 지역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 체험홈이라도 신청해보고 싶지만 몇 호 안 되는 자립 체험홈으로 자립체험을 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체험으로 자립을 경험해 보면 부모가 없더라도 자녀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편안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기회가 없다 보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부모가 해서는 안 되는 안 좋은 상황이 여기저기서 많이 벌어졌다고 봅니다. 저는 이 점이 무척 안타깝습니다.

자립 체험주택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양천구와 강남구 두 곳 있습니다. 굉장히 부족합니다. 최소한 자치구에 한 곳씩이라도 자립 체험홈이 있어야겠습니다. 강동구에 사는 당사자가 양천구, 강남구 자립 체험홈에 가서 자립체험을 한다는 것은 너무 힘이 많이 듭니다.

탈시설로 지역에 자립할 자립지원자를 발굴할 때 본인 또는 부모의 의사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설에 입소할 때 보다 현재 현격히 장애가 심화된 발달장애당사자도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시설에서는 숫자적으로 1:1 지원이 힘든 상황이니 발달장애

특성상 의사표시가 원활하지 못해 지원이 적극적이지 못하면 퇴행되어 의사표현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이 많습니다.

그런 당사자의 의사를 어떻게 물어볼 수 있는가요. 발달장애 당사자는 탈시설 자립을 해야함을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봅니다. 더 많은 발달장애 당사자가 탈시설 대상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역사회로 자립할 때 1:1의 활동지원사 지원과 시범사업의 시스템으로 훨씬 좋은 발달장애인의 삶이 보일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발달장애특성상 의사표시가 원활하지 못해 탈시설 대상에서 제외되어 시설에 있을 수밖에 없는 발달장애인은 없었으면 합니다.

건강이나 의료, 교육 등 지원인의 전문화도 장애특성별로 전문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 기관이나 지원자가 모든 장애의 전문지원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탈시설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기간에도 재가 장애인의 자립도 동시에 시행되어야 합니다. 재가 장애인이 부모 사후에 시설로 갔다 나오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에게 주택은 우선 지원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주택과 자립에 대한 지원 없이 하루 아침에 지원주택에 들어가서 자립하는 것은 부모도 당사자도 힘들고 벅찬 일입니다. 당사자도 자립에 필요한 정서적으로 자립이 되어야 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지원을 요구하는 것도 인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것을 자립 체험 중 익히게 됩니다. 부모는 더더욱 정서적으로 자녀를 자립시켜야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모가 건강할 때 자립해야 합니다.

자녀를 제일 잘 아는 부모가 옆에서 지켜보며 자립생활을 함께 맞추어 가는 것이 편안한 마음이 들고 정서적으로 좋습니다. 재가 장애인이 자립하면 지원하는 돌봄지원의 예산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예산으로 한정된 인원만 돌봄 지원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재가 장애인이 자립을 하도록 하는데 실제적인 지원이 더 필요합니다. 부모가 건강할 때 재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지원주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원주택에 1인으로 들어온 저희 자녀의 현재 생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회는 무척 잘 지냅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가정일은 스스로 하고 용돈 카드로 먹고 싶은 것도 지역에서 사 먹고 즐길 줄 압니다. 좋아하는 TV 프로그램도 선택하여 보며 좋아합니다. 아파트 주위를 산책하고 아파트 내에 설치된 운동기구가 많아 운

동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운동하며 만나는 이웃과 인사할 수 있고 친해질 수도 있어 좋습니다.

자립주택 가까이 자립인을 지원하는 성민복지관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활동지원사와 복지관의 코디네이터 및 주거코치는 당사자 중심의 지원 체계로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성민복지관의 지원은 당사자의 생각과 당사자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좀 더 당사자가 원하는 삶이 되도록 지원하고 받고 있습니다.

탈시설 장애인도 재가 장애인도 더 많은 양과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과 전문화된 인력 지원서비스가 꼭 필요합니다. 발달장애인이 혼자서도 살던 지역에서 살 수 있다는 희망이 발달장애인 가족이 힘내서 살 수 있도록 합니다. 저의 자녀처럼 자립하여 부모도 자녀도 행복하게 지역에서 잘 살길 원합니다. 자립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주 제 발 표

현황발표: 탈시설 로드맵 및 탈시설 시범사업 추진 현황과 과제

한영규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장애인자립추진팀 팀장

1. 개요

-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집단시설 중심의 보호에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한 지원 중심으로 변화하는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수요 등을 반영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시범사업임
- 유럽·미국 등 외국에서는 ‘60년대부터 탈시설 및 자립정책을 진행하여왔으며, UN장애인권리협약과 논평 제5호에서도 우리나라 장애인의 주거 결정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음
- *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거주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를 가지며, 특정한 주거 형태를 취할 것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1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2013~2017년)을 통해 5년간 604명의 자립을 지원하였고, 현재 2차 5개년 계획(2018~2022년)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으로 탈시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거주시설에서의 자립 지원 정책을 지속 발굴 중
- 정부는 지자체의 노력에 발맞추어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하여 관련한 거주시설 전수조사, 민관협의체 운영을 통해 중장기 로드맵인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을 수립하여 발표(‘21.8월)함
- 로드맵의 주요과제인 장애인의 단계적 거주전환 지원을 위한 3년간의 시범사업을 ‘22년부터 진행 중으로, 현 정부 국정과제에도 ‘시설거주 장애인 등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주택 및 주거서비스 지원’을 포함하여 관련 정책을 검토 중

2.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 보건복지부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하며, 앞으로 20년간 단계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을 발표
- 로드맵은 분야별로 ① 장애인이 자신의 주거를 선택할 권리 보장 ② 탄탄한 자립경로 구축 ③ 독립생활을 위한 서비스 발굴 등 사회적 지원 확대 ④ 거주시설의 지역사회 자립촉진 기능 강화 ⑤ 머무는 동안 안전하고 자유로운 당사자 중심 운영이 이뤄지는 거주시설로 전환 ⑥ 자립지원을 위한 법령개정 등 지원체계 조성으로 구성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주요과제

보건복지부

① 장애인의 주거 선택권 보장

- 대상자 발굴 위한 자립지원조사 매년 실시
- 성년이 되는 장애아동 우선 지원
- 시설단위 거주전환 추진

② 탄탄한 자립경로 구축

- 시설 내 자립지원 전담조직 구성
- 일상생활·사회활동 체험·훈련기회 제공
- 자립지원 시범사업(’22)

③ 독립생활 위한 사회적 지원 확대

-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지원
- 주거유지서비스 개발
- 빈틈 없는 재가서비스 연계

④ 거주시설을 지역사회 자립촉진 기관 전환

- 장애인 거주시설 신규설치 금지
- 24시간 지원 필요 장애인 전문 서비스 제공기관
- 24시간 장애인 전문 서비스 제공기관
- 단기·공동생활가정
- 시설점검 및 운영기준 정비

⑤ 머무는 동안 안전하고 자유로운 거주시설

- 당사자 중심 시설 운영
-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개선
- One Strike-out 제도 도입

⑥ 민간-공공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 법적 기반 마련
- 민간지원 체계화
- 공공 연계·협력

- '22년부터 '24년까지 3년 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관련 법령 개정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탈시설·자립지원 기반 여건을 조성하고, '25년부터 본격적인 탈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을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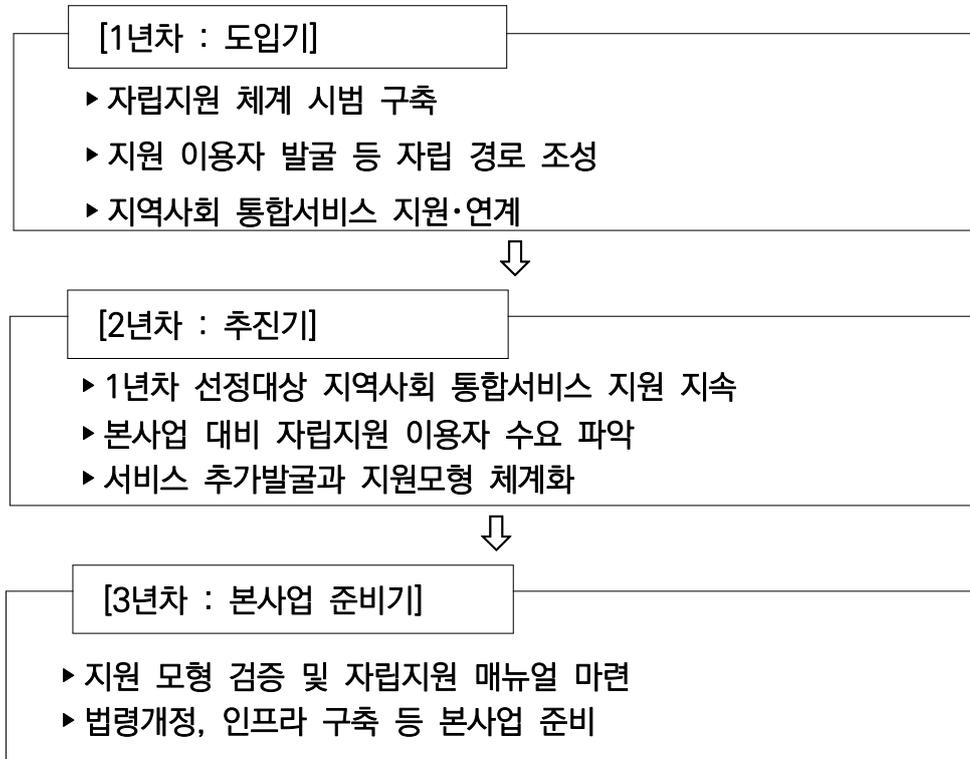
- 시설장애인 대상으로 자립지원 조사를 의무화하고, 자립시 초기정착 등을 지원하는 자립지원인력 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지원, 각종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사회로의 안정적인 정착 및 주거전환 지원을 위한 자립경로 조성 추진
- 거주시설은 법 개정을 통해 신규 설치를 금지하고, 현 거주시설은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변경하여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대상 전문서비스 제공으로 기능을 변환해 나가도록하고, 단기·공동생활가정은 본래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전반적인 시설 점검 및 운영기준을 정비해나가는 방안 등이 포함
- 로드맵 주요과제들의 이행과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정책 지원을 위해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설치, 동 센터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전환 모델 개발, 관련 실태조사·연구, 지자체 탈시설 사업 모니터링 등 시설거주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지원을 위한 민간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
- 현재, 로드맵에 명시된 2개의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주요과제들의 추진방안을 마련 중으로, 첫째, 거주시설에 대한 기능전환 시범사업(‘21~’ 23), 둘째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22~’ 24)임
- 국회에서 탈시설 관련 근거, 거주시설 관련 사항 등을 규정하는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안’,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 주거서비스 지원법’ 등이 계류 중

3.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 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을 위해 1:1 면담, 조사 등을 통해 사전에 자립수요를 파악하고 지역사회 내 주거, 일자리, 의료, 사회참여 활동 등을 연계하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1월부터 사업 수행 지자체 공모를 시행
- 시범사업 수립과정에서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의 장애인 정책자문단 논의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시범사업 도입방안을 보완하였다. 특히, 거주시설의 체험홈을 연계하여 자립 전 단계를 지원하는 방안을 시범사업에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거주시설 퇴소 및 지역의 자립을 명확하게 지원할 필요성 등이 제기되어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변경
- 또한, 대상자의 경우 자립지원조사를 통해 자립 의사를 밝힌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되, 거주시설 입소대기를 하고 있는 인원도 대상으로 포함하여 재가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위한 방안도 시범사업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반영함
- 시범사업은 총 3년간 진행되며, 연차별로 단계적 추진으로 장애인의 자립 경로를 체계화하고, 장애인 개별 특성과 지역 여건에 맞는 서비스 지원모형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
- 1년차 2022년은 시범사업 도입기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자립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별 탈시설 계획 수립 및 사업수행을 위한 기관 설치 및 위탁 등 선정, 자립지원 전담인력 채용 등 사업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2년차는 시범사업을 확대하며 지원 모형 등을 검토하며, 본사업 대비를 위한 장애인의 자립 수요 조사와 생활실태 및 복지서비스 필요도 등 추가 필요서비스 발굴을 위한 조사 등을 추진함
- 3년차에는 본사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시기로 지원 과정 평가와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지원모형 표준화 및 매뉴얼 마련, 법·시행령·시행규칙과 사업 지침 등 개정 추진하며, 관련 법적근거 마련, 예산 반영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추진

*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근거하여 대규모 신규사업(총사업비 500억 또는 국비 300억 이상)에 대한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 평가

< 연차별 시범사업 추진계획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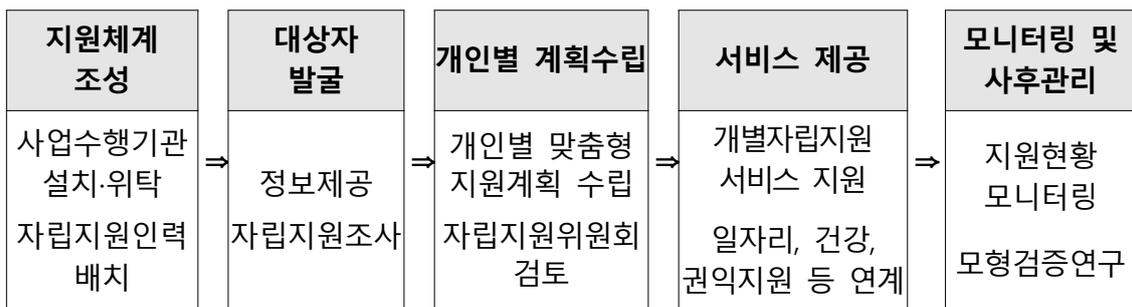
- 시범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자체에서 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하며 세부 지원 모형을 마련하고, 안정적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기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계획을 수립함

<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추진개요 >

<p>비전</p>	<p>거주시설에서 삶의 터전으로, 어울려 살아가는 삶의 지원</p>
<p>추진 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장애인 당사자의 주거결정권 + 지역사회 거주 권리 ◇ (지원) 지역사회 독립생활 가능한 '주거+고용+복지' 서비스 결합 ◇ (방식) 단계적 추진 : 시범사업 → 제도·인프라 정비 →본사업시행
<p>목표</p>	<p>각 지역 상황과 장애 특성 유형에 맞는 자립 경로 조성, 지역사회에서의 체계적 서비스 지원에 대한 모형 검증·보완</p>
<p>예상 결과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역사회 자립대상자 발굴기준 및 지역별 대상 규모 추계 ②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 및 자립지원 인력 역할 규정 ③ 장애 유형 등을 고려한 필요서비스 수요 등 파악 및 개발 ④ 지역사회 자립 효과에 대한 분석·평가(중단연구)
<p>시범 사업 주요 추진 방안</p>	<p>① 참여 지자체 공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역량 고려 ▪ 통합돌봄 선도사업 등 관련 사업과 연계 <p>② 대상자 특성별 모형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굴과정) 1:1 조사 등 평가 도구 적용 ▪ (특성별) 대상자 및 지역 특성에 맞는 모형 시범 검증 <p>③ 지역사회 안정적 생활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지자체 복지제도·서비스, 민간 자원 최대한 활용 ▪ 서비스 통합지원을 위한 자립지원 인력 배치
<p>지원 체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범사업 평가·분석 및 모형 정립 정책연구 병행 ▪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지원 및 자문단 운영

- 시범사업은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공모를 통해 10개 지역을 선정하였으며, 장애인 자립지원 정책 추진의지와 지역사회 기반 등 역량 등을 종합고려하여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충남 서산시, 경북 경주시, 전북 전주시, 전남 화순군, 제주 제주시의 10개 지역을 선정하였음
- 지원대상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역별 20명씩 총 200명으로, 거주시설 장애인과 입소적격 판정을 받고 대기 중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별로 본인과 보호자의 의사와 서비스 필요도 확인을 위한 자립지원조사와 1:1면담을 거쳐 지원대상을 발굴할 계획
- 지역사회 자립 시 대상자별 특성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복지서비스 지원과 민간 복지관의 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며, 장애인 4명 당 1명의 자립지원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탈시설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조사 및 개별자립지원서비스 연계, 지역사회 정착 과정에서 주거환경개선·보조기기 등을 지원함
- 아울러, 지역사회 자립 초기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위하여 활동지원서비스를 개인별 지원계획 등에 따라 월 10~20내외 또는 월 150시간을 추가 지원함

〈 시범사업 개인별 자립지원 과정 〉



〈 개별 전환 계획 수립 예시 〉

000님의 개별 전환 계획 수립			
이용자	000	생년월일	1982.00.00.
장애특성	장애정도가 심한 발달장애	구분	자립지원형
주된 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을 희망함 - 혼자 살고 싶거나 00님과 같이 살아도 좋다고 함 - 커피전문점이 가까우면 좋다고함 	강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낮가림이 없음 - 자립에 자신감이 있음 - 스스로 마트나 쇼핑을 즐겨함
전환 계획	<p>○ 살고 싶은 지역 및 주택 선호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시설에서 가까운 임대아파트 형태를 희망함 - 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난방이 잘되는 주택 으로 희망함 - 평소 커피를 많이 좋아한다는 입주자의 의견에 따라 가까운 커피 전문점이 있는 주택을 희망 <p>○ 같이 살고 싶은 동거인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시설에서 가까이 지냈던 00님과 같이 살고 싶어함 - 00님이 거부할 경우 혼자 살아도 좋다는 의사가 있었음 <p>○ 입주일자 및 이사업체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업체 견적 및 의뢰 - 가구 및 전자제품 구입으로 이용자와 동행 예정(00월00일) - 입주청소 견적 및 의뢰 <p>○ 이용자의 재정상황 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00.00.기준 00,000천원 잔액 확인 		
필요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의 선호도에 따른 임대아파트 탐색 - 00님과 동거 가능한 또는 독립가능한 임대아파트 확인 - 이사 지원자 섭외 및 이사업체 견적 - 도시가스 안전장치, 방법창, 주택 개선 견적 예정 		
이주지원 예산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 비용 : 100만원, 가구 : 150만원(옷장 2, 서랍장 1, 침대 1, 거실장 1) - 입주청소 : 50만원, 주택환경개선비 : 300만원 - 가전제품 : 275만원(티비 80만원, 냉장고 60만원, 전기밥솥 20만원, 에어컨 80만원, 전자레인지 10만원, 가스레인지 15만원, 선풍기 10만원) - 계 : 875만원 		
____님의 담당자 의견	<p>000님은 자립을 희망하여 자립형으로 선정되었음.</p> <p>임대아파트를 선호하며 00님과 같이 살고 싶어하나 00도시공사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며 재정상황 000천원에서 875만원 지출예상됨</p> <p>시설과 가깝고 커피전문점이 있는 주택을 찾아보고 이사견적 의뢰예정임</p>		

4. 시범사업 주요 추진현황

- 시범사업은 각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다양한 운영체계를 구성하는 것을 인정하였으며, 각각의 운영체계의 장단점 등 효과를 분석하여 향후 본사업 시행시 적용할 계획
- 각 지자체별로 다양한 형태의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지역별 상황에 맞게 사업 운영을 추진할 예정이며, 현재 각 수행기관별로 근무할 자립지원인력을 채용 진행 중임
- 각 수행기관별 역할은 주로 지역내 거주시설 대상 방문 조사 등을 통해 자립대상자를 발굴하고,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며, 지역사회내 연계 가능한 서비스 자원의 발굴과 대상자 연계 등 담당

〈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별 운영주체 및 수행기관 〉

운영주체 유형		지자체	수행기관
지자체 주도형(2)		경주시	경주시청
		화순군	화순군청
민관협력형 (8)	분리형(2)	서울시	자치구 및 제공기관 선정예정
		부산시	부산시탈시설주거전환지원단
	통합형(6)	광주시	광주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
		대구시	장애인지역사회공동체
		인천시	인천사회서비스원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
		서산시	충남사회서비스원
		제주시	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 통합돌봄지원센터
		전주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연대

- 지자체별 시범사업 추진과정과 별개로, 전반적인 시범사업 운영과정에서 서비스 지원 모형 마련을 위한 다양한 사항의 논의를 위하여 학계, 장애계, 장애인부모 등 약 32인으로 구성된 현장의견 수렴 목적의 ‘시범사업 자문단’ 을 구성함(‘22.6월)

-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사항의 논의와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하여 주요 분야별로 분과를 구성하여 운영

〈 분과별 구성 및 주요 주요 논의안건〉

분야	주요 토론 안건(안)	주관(협조)부서
주거공간 추진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적 주택공급 마련 및 연계방안 - 주거유지서비스(안) 마련 - 공동주택 및 지원 서비스 개발 논의 - 주거유형(지원주택, 전문서비스형, 의료형 등)의 모델화 - 지역사회 소통을 위한 장애인 건축 커뮤니티 공간 형성 	복지부 장애인자립추진팀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
건강·치료 추진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민간-보건소-병원 등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방안 - 지역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건강 네트워크의 조성 방안 - 최종증 또는 고위험군 장애인의 지원관리 방안 - 민간의료기관의 참여확대 및 효율적인 연계 방안 - 의료기관의 접근성 및 의사소통 향상 방안 - 스마트홈웨어 및 IOT 활용방안 논의 	장애인정책과
주간활동일자리 추진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낮활동 서비스 평가 및 개발 등 발전 방향 모색 - 제공인력 전문성 향상 방안 - 발달장애인형 일자리 개발 및 민간 업체 연계방안 - 공공일자리 확대 및 지원방안 	장애인서비스과 장애인자립기반과
발달장애인·권익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돌봄 네트워크의 활성화 위한 전달체계간 연계방안 - 지역돌봄 네트워크 활성화 위한 마을 내 조직화 방안 - 거주시설 자립 사후관리사업 추진위한 지역사회 연계방안 - 지역 내 범죄예방시스템 구축 및 지역주민 연계방안 - 의사소통 도구 개발 및 매뉴얼 마련 방안 - 발달장애인평생교육, 자산형성 방안 등 	장애인정책과 장애인권익지원과
모니터링 및 평가 등 사업지원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시설 등 시범사업 평가위한 성과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 방안 - 지역별 네트워크 위한 지역자원조사·개발 등 자원조직화 방안 - 각 분야의 부서 및 사업 간 협력 내용 및 체계 분석 	장애인자립추진팀

-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주거공급은 중요한 사항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별로 매입임대 주택, 전세임대주택 등 지원을 위해 국토부 협의 진행 중이며, 엘리베이터와 출입문 등 편의시설이 반영된 주택 등을 제공하고 그 외 주거개선은 시범사업 예산을 통해 지원 예정

- 각 지역별로 자립지원인력 채용이 완료되면, 8월 중 전문가 교육 등을 실시한 이후 지역별로 자립분야 전문가, 공무원, 장애인 단체, 거주시설 관계자 등 다양한 주체로 자립조사원을 구성하여 거주시설 장애인 및 입소 대기자를 대상으로 1:1 개별 면담 조사를 거쳐 대상자 발굴을 진행할 계획
- 자립지원위원회를 각 지자체별로 구성하여, 대상자 선정 및 지역사회 자립과정에서 적정 서비스 제공 여부 모니터링, 상황 변경 시 계획 변경사항 등 협의하고 시범사업 운영관련 사항을 논의
- 시범사업을 통해 지원 모형과 전달체계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를 병행하여, 구조화된 모니터링 지표를 근거로 사업 추진사항과 의견을 확인하고 지자체의 시범사업 추진 환경과 특징을 고려한 전문성 있는 분석 및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

5. 시범사업 의의 및 향후 과제

□ 지자체별 이행사항 관련 전문가 등 주요 의견

○ 각 지자체 단위 탈시설 계획 수립의 중요성

- 탈시설 계획 수립 여부는 지자체의 탈시설 정책 의지와 수행 경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주요한 지표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책 환경 조성, 자립 경로 조성, 서비스 지원 정도 등의 시범사업 성과까지 이어지는 계획임
- 기존 탈시설 계획 수립 지역은 서울시, 광주시, 대구시, 부산시, 인천시 총 5개 지역으로 시범사업을 포함하여 운영
- 전라북도는 '22년 5월 수립하였으며, 충청남도는 '22년 내 탈시설 5개년 계획 수립 예정으로 기존 지자체별 계획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추세

○ 시범사업 전문인력

- 지역사회 정착을 가장 밀접하게 지원하는 자립지원인력은 시범사업에서 4명당 1

명을 기준으로 배치

- 서울시와 대구는 추가 인력배치 예정으로 자립지원 대상자 장애 유형 등 특성을 고려한 적정 지원 인력기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
- 대도시 지역 외 농어촌 지역은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워 전담인력 채용을 위한 자격 기준과 교육 등 전문성 관리방안이 요구됨
 - * 장애인복지경력 3년 → 사회복지경력 3년 또는 거주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경력 1년 이상

○ 장애인의 안정적 자립을 위한 주택확보

-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시범사업 대상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지역별로 매입임대 주택, 전세주택지원 등 입주 가능 물량 확보 중
- 기획되어있는 주거가 아닌 기존 임대주택 등의 물량을 연계함에 따라 서비스 제공기관과 장애인 주거간의 물리적 거리 제약 발생
- 대상지역 선정 및 장애특화형 주거 설계 등 주거 공급에 1~2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사전 수요 발굴 및 안정적인 주거 공급을 위한 관련 법적근거 마련 등 방안 마련 필요

○ 이용자 이주 지원 및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

- 각 지역별로 시범사업 예산지원 외의 자체 예산을 통한 개별 서비스 지원을 기획 중
- 임대보증금 및 자립 생필품 구매를 위한 자립정착금, 활동지원 추가 지원 등을 제공 중으로 원활한 자립 지원을 위한 추가 발굴 검토

○ 탈시설 자립과정에서의 거주시설 등의 협력 및 연계

- 각 지역별로 지역내 유관기관 및 보호자 대상 설명회, 장애인 특성에 맞는 홍보(부산시), 동료지원가 정보제공(전주) 등을 통해 지역내 기관간 네트워크 등 협조 체계 구축 중

- 거주시설에서 자립대상자 발굴 및 조사, 탈시설 과정 훈련 등을 원활하게 제공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등으로 변환을 희망하는 거주시설의 전환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적 근거 마련



토 론: 탈시설 시범사업 선정지역 현황 [대구]

권수진 || (사)장애인지역공동체 탈시설시범사업추진단장

탈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구지역 현황

2022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구 지역 현황



발 표 자 권수진 (사단법인 장애인지역공동체)
발 표 일 2022년 7월 29일 오후 2시
발 표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목차

2022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 대구지역 현황



01
수행기관 소개

02
사업 추진현황

03
제언 (수행기관 의견)

01. 장애인지역공동체 미션 및 비전



02 사업 추진 현황

현재 2022년 7월 기준, 진행 사항 중심으로-



1. 사업 추진방향

시설 말고, 지역에서 '나'로 살아갈 권리



나의 집에서 사는 삶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서비스 제공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선택권

입주자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개별지원계획 수립,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개발 등 의사표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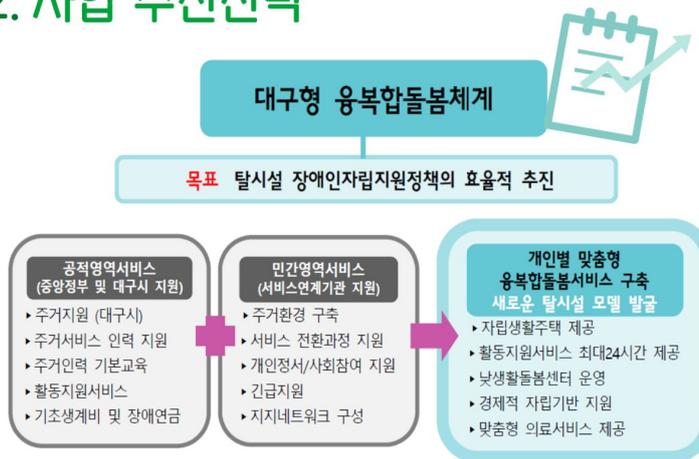
사회참여와 지역네트워크

소득보장, 일자리 활동, 일상생활 지원, 주간활동 서비스, 식사지원, 사회참여활동, 보건의료지원, 권익옹호지원 등 개인의 관계망 확장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 대구

2. 사업 추진전략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 대구

3. 예산 확보 및 집행계획

 내 용	
총 사업비	1,205,800천원 (국비 215,400천원, 시비 990,400천원)
복지부 사업비	430,800천원 (국비 215,400천원, 시비 215,400천원)
대구시 추가지원	775,000천원 (시비) - 대구시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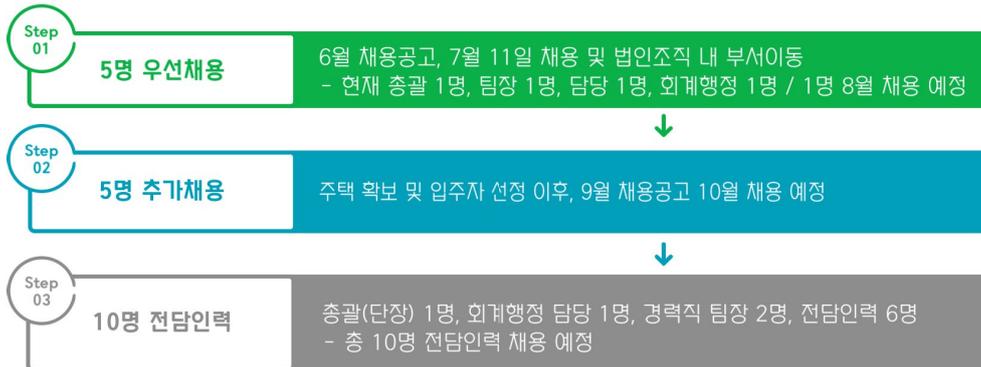
**대구시 추가지원 내용

: 자립생활주택 임대보증금(10개소), 주거환경개선비 추가, 가구구입비 추가, 5명 인건비 추가, 자립정착금 지원 추가, 운영비 추가, 활동지원 대구시 추가지원(별도사업 연계)

4. 사업 진행 흐름 2022년도 하반기



5. 전담인력 채용 ▶ 보건복지부 지침은 5명 기준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 대구

6. 주택 확보 대구광역시 동구지역 중심



- ☞ 한국토지공사(나) 매입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주택확보 용이
- ☞ 지하철 1호선 인접한 공공주택 확보
- ☞ 장애인지역공동체 인근 버스노선 저상버스 100%확충 협의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 대구

6. 주택 확보 대구광역시 동구지역 중심

내 용	
 LH 매입임대 (빌라)	서호동, 방촌동, 임석동, 율하동 등 지하철역 도보 5~15분 거리 위치 (반야월역, 신기역, 동촌역, 율하역 등) ※ 장애인지역공동체 지하철 인심역에서 도보 2분)
LH 국민임대 (아파트)	대구역신LH천년나무 3, 4, 6 단지 - 저상버스(동구4, 4-1) 운영, 장애인콜택시(나드리콜) 차고지 인근위치
LH 행복주택 (아파트)	대구신서역신LH천년나무 10단지 (행복주택) - 특화된 편의시설 (도서관, 피트니스센터, 스터디룸 등 복합커뮤니티센터 있음)



6. 주택 확보 동구 서호동 - LH매입임대 1채



공가리스트에 엘리베이터가 없다고 표시되었던 주택



현장방문 시, 엘리베이터 확인



6. 주택 확보 동구 입석동 - LH매입임대 2채



계단 위에 있는 엘리베이터, 접근의 어려움



화장실 입구 높은 턱, 편의시설 공사 필요



6. 주택 확보 동구 용계동 - 도시개발공사 매입임대 3채



도시개발공사 매입임대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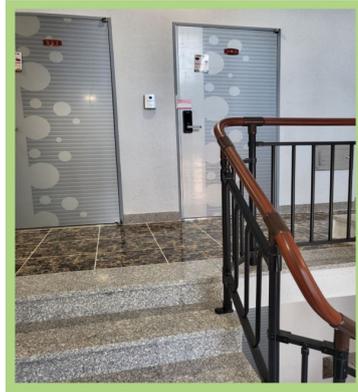
출입문 경사로 난간 미설치, 안전확보 필요



6. 주택 확보 동구 효목동 - 도시개발공사 1채



도시개발공사 매입임대주택



현관문 바로 앞 계단, 안전확보 필요



필시실 장매인 지역시원 자립지원 시범사업 - 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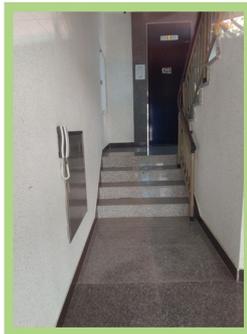
6. 주택 확보 대구광역시 동구지역 중심

내 용	
 LH 매입임대 (3채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월부터 LH매입임대 공가 주택 현장방문 실시 - 5월 3채 확보 이후 장애접근성 고려한 주택 없어 도시개발공사 협조요청
도시개발공사 매입임대 (4채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월 도개공 협조하여 공가 주택 현장방문 실시 - 6월 말 4채 추가확보, 현재 심의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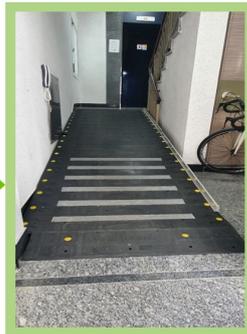


필시실 장매인 지역시원 자립지원 시범사업 - 대구

7. 주거 환경 조성 편의시설, 가구/물품 구비



엘리베이터 이용 접근 어려워 편의시설 공사 필요(내매입임대)



휠체어 접근가능한 경사로 설치 (2022. 3.)



7. 주거 환경 조성 편의시설, 가구/물품 구비



• 집 앞 입구 경사로



• 자립생활공간 거실 및 주방



• 자동발레인조대



• 리모컨 전등스위치



• 휠체어 사용지도 가능한 식탁대



•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



• IoT 원격제어장치



• 소방안전용품



• 나란의 방



• 이동식리프트



• 엘리베이터



• 자립주택 외투



03 제언

탈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서 의견 -



1. 주택확보를 위한 다각적 노력

	내 용
<p>① 편의시설이 갖춰진 공공임대주택 확보 및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휠체어 접근성 등 유니버설 디자인(모든 주거약자를 포괄)을 적용 - 장애인(고령자)을 고려한 공간면적, 입지조건 반영 - 공공주택 매입 또는 시공 시 장애인접근성 규정을 명확히 - 편의시설 갖춰진 주택은 장애인가구 우선 제공 의무화
<p>② 장애인 당사자 개인 직접계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관리여부, 근거법조항 미비 등의 이유로 LH-지자체 간 계약 선호 (지자체마다 상이함. 전대차계약 형태로 개인계약 체결하는 지역도 있음) - 시범사업 참여 장애인을 '관리'가 아니라 '주체'의 관점으로 인식하고 지원 - 장애인이 주택 계약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방안 필요

1. 주택확보를 위한 다각적 노력

	내 용
<p>③ 주택형태의 다양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대구시 운영 자립생활주택은 44채이고, 2인 1주택의 형태임. - 장애인의 개인적 특성(도전행동이 있는 발달장애인 등) 고려 필요함. - 1인 1주택, 1층 단독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자립생활주택 모델 고안
<p>④ 책임있는 탈시설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H는 주거공급의 주체, 탈시설 서비스 공급은 지자체가 주체임. - 이원화된 형태가 하나의 틀로 묶여 탈시설 주거지원의 책임성 강화 필요 -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제시 (전국적 서비스 모델 기준 마련, 예산 등)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 대구

2. 향후 사업추진 시 개선사항

	내 용
<p>① 현실적인 전담인력 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범사업 지침은, 장애인 4명당 1명의 전담인력이 지원하도록 명시되어있고, 지자체마다 운영방식과 지자체협약에 따라 내용이 상이함. - 주거지원서비스 인력은 현재 합의된 기준이 없고, 각 지역의 경험과 조건에 따라 상이함. (서울시 지원주택은 코디 1명이 4~6명 지원, 주거코치 1명이 2~5명 지원, 슈퍼바이저 1명이 코디 4명 담당, 실무총괄자 1명이 슈퍼바이저 2~3명 담당) - 현재 대구시 운영 자립생활주택은 장애인 2명(주택1채)당 전담인력 1명 배치 별도 운영인력 및 관리인력, 슈퍼바이저 부재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 대구

2. 향후 사업추진 시 개선사항

	내 용
<p>① 현실적인 전담인력 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기관의 경우, 총 12채 자립주택을 운영하며 슈퍼바이저(총괄), 회계 담당 등 전담인력 외 구성원이 필요하여 기관 내에서 역할 재배치하여 운영중임. - 연구결과, 지원인력 1명당 2~4명을 기본으로 하고 서비스제공에 따라 유연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음. - 업무특성 : 역동적인 지역사회 내 다양한 예측불가한 개인의 삶을 지원, 일정한 이용기간, 시간대,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고 삶의 전반에 대한 서비스 및 지원이 필요하고 관리해야 함으로 어려움이 많음. <p>⇒ 향후 시범사업 전담인력의 현실적인 구성과 그에 따른 추가예산확보 필요함.</p>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 대구

2. 향후 사업추진 시 개선사항

	내 용
<p>② 지원과정에서 권한과 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대구시립희망원 산하 장애인거주시설 시민마을폐지에 따라 대구시 무연고 중증중복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원함. - 중도중복장애인 탈시설 지원 시, 수행기관의 법률과 책임의 권한은 제한적임. - 공공후견인 지정 소요기간이 5개월 넘게 걸려 사회서비스 신청 등 어려움 발생 - 관련사항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에 질의했을 시, 시범사업 수행기관의 권한으로 진행 권고 답변 받았음. <p>⇒ 보건복지부 공공후견인 제도 보완 (후견인 수급, 행정절차 간소화 등) ⇒ 기초지자체의 탈시설 및 자립생활 장애인에 대한 권한 설정 필요</p>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 대구

2. 향후 사업추진 시 개선사항

	내 용
<p>③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확대 및 추가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80%가 발달장애인임. - 활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시, 발달장애인은 평균 4시간만 이용하고 있음. - 현재 시범사업은 월150시간 2명, 월20시간 18명 추가지원 할 예정이지만, 낮활동, 야간, 주말시간대 자원연계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사회참여활동과 일상 생활 유지의 여러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p>⇒ 중증의 발달장애인도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서비스 제도 개편 및 시범사업 추가지원 시간 확대 필요함.</p>

2. 향후 사업추진 시 개선사항

	내 용
<p>④ 탈시설·재가장애인 식사·영양관리 서비스 사업 전국적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도 서비스를 실시하는 지역은 경기도 성남시, 전북 전주시. 2곳뿐임. - 해당지역의 장애인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올해는 사업공모가 늦어져 기초지자체에서 준비할 여력이 안된것으로 확인됨. - 향후 시범사업 참여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모기간과 예산확보 필요 <p>⇒ 식사준비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탈시설 후 건강한 식습관과 영양관리를 위해 1:1 맞춤형 영양 관리가 제공되는 '탈시설·재가장애인 식사·영양관리 서비스 사업'의 전국적 확대 필요함.</p>

3. 주거지원서비스 원칙과 방향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 필요

	내 용
<p>지역사회 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 기준 개발연구 (2021, 한국장애인개발원)</p> <p>p.87 시사점 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거지원서비스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에 따른 자립적 삶과 지역사회 포용을 목표로 한다. 2. 주거지원서비스는 지역사회 내 보편적인 형태의 개인별 주택 주거지에 제공된다. 주택은 민간과 공공 모두를 통해 확보 가능하며 장애인 개인이 법적인 통제 권한을 지니는 형태여야 한다. 3. 주거지원서비스는 모든 장애인이 그 필요에 따라 신청하고 선정받아 이용한다. 4. 주거지원서비스의 이용은 당사자와 그 가족, 공공후견인, 지자체 사례관리자, 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담당자에 의한 계약 또는 국가기관 의뢰에 따라 이루어진다. 5. 주거지원서비스의 종료여부가 장애인의 주택에서의 퇴거를 결정하지 않는다. 6. 장애인은 본인의 주거지에서 퇴거당할 위험 없이 주거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7. 주거지원서비스의 제공인력은 서비스 제공의 설계 및 필요도 판단, 위기상황 대응 등의 이유가 아닌 한 가능한 직접적인 신체 지원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다.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 대구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탈시설 권리'가 존중되길 바라며...

UN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는,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과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 분리를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 및 접근권 보장'을 명시하고 있음.

장애인의 선택권은,
 거주시설에서 살지, 지역사회에서 살지 선택하는 선택권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해 살아갈 권리를 의미하는 것임.

탈시설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생활 환경조성을 위해 수행기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할 것이며,
 지자체, 중앙정부 또한 시범사업을 통해 탈시설 지원의 과감한 결단을 기대함.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 대구

THANK YOU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구지역 현황



사단법인 장애인지역공동체

연락처 053) 953-9460

이메일 jangjigong@daum.net

주 소 대구시 동구 동내로 21, SH빌딩 1층

2022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구지역 현황

토 론: 탈시설 시범사업 선정지역 현황 [인천]

정재원 || 인천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장

최근 세계보건기구(WHO)는 “장애는 앓는 것이 아니다. 장애는 치료의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으로 장애가 발생해 평생을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비장애인과 동등한 인격체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 며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사회에서는 지금까지 사회복지서비스가 지금까지 의료적 모델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오면서 장애는 개인의 문제라는 관점으로 제한된 기반에서 안전, 치료, 교육, 훈련 중심적이고 프로그램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안전, 보호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에서 벗어나 재활시대, 인권시대, 자립시대, 독립시대로 진화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 ‘의료적 모델’ 에서 ‘사회통합 지원주택 모델’ 로

보건복지부에서 2020년 7월 발표한 “지역사회통합 돌봄의 개념과 대상” 에서는 사회복지의 방향이 지역사회에 의한 통합적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개념으로 사회복지본연의 목적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서비스 제공대상이 경제적 빈곤자에 대한 제한적 서비스 제공이었던 부분에서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대상으로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대상이 ‘욕구에 기반한 누구나’ 란 변화되는 새로운 시대 환경을 직시하며 지금까지 전개해오던 서비스 방법과 자세를 바꾸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즉, 서비스의 내용(삶)을 대상자와 함께 설계하고 서비스 지원계획을 당사자가 결정하도록 합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개인적 또는 사회적으로 받고 누리고 있는 서비스 환경을 장애 당사자에게도 제외없이 그대로 누릴 수 있게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시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의료적 모델’ 과 ‘사회통합 지원주택 모델’ 의 내용과 차이점을 살펴보고 의료적 모델의 제한점을 보완하여 사회통합 지원주택 모델이라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환경에서 삶을 돌보는 지원 서비스 체제를 개척해야 합니다.

첫째, 의료적 모델에서는 대상자를 단순한 신체 연령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이를 기준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을 안전과 보호만을 최대

이고 최고의 개념으로 한 제한된 구조 속에서 장애인은 일방통행적이고 단편적인 모습으로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 받았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도 프로그램 중심의 기술적 방법에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기술로 향상되어야 합니다. 즉, 삶의 중심이 시설이 아닌 개인의 독립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는 모델로 변화해야 하며 시대적 서비스 욕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사회복지 현장이 새롭게 준비해야 할 시대적 환경은 ‘개인 문제 중심’에서 ‘전생애주기별 연속성’의 관점에서 개인과 사회환경을 깊이 있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의료적 모델인 장애인 거주시설은 반세기 전 사회적 환경에서 구축된 모형입니다. 시설중심적 서비스인 의료적 모델로는 다양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그 내용과 질에서 매우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설중심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사회적 현상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전문 영역들 간의 협업시스템을 구축하여 생애주기별로 지원되어야 할 서비스 전달체계로 재편성해야 합니다. 현재는 그 당시 환경 문화 의식주 등과 수준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 문화 환경이 발전되어 개인의 인권과 권리가 중요시되면서 평등과 형평성이 새롭게 조성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이미 새롭지 않습니다. 과거의 ‘어떻게(how to live)’에서 ‘잘(well being)’이 주요점이 된 지금은 사생활권 자유권 선택권 소유권 등이 보장되는 독립적인 생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 개인행동과 사회환경이 바뀌면 사회복지 서비스 기술과 모형도 사회의 변화에 부응하는 방법과 기술로 바뀌어야 합니다.

2. ‘리빙 케어’에서 ‘라이프 디자인’ 서비스 시대로

윈스턴 처칠경은 “사람은 집을 만들고, 집은 우리의 삶을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주택은 사생활권과 자유권이 보장되는 자신만을 위한 독립된 사적 공간이 필수입니다. 주거의 기능은 단순하게 먹고 자는 공간만이 아니라 주택과 가정생활과 근린생활 환경을 포함한 살림살이의 기본 터입니다. 주택은 형태를 지닌 물리적인 환경을 담은 건축물로서 이를 기반으로 한 주거환경이 적절한 조건을 갖추고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어질 때 인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이라 함은 안전성. 표현성. 쾌적성. 편리성. 경제성. 사회성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성되어야 할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서비스는 무엇일까요? 개인과 지역사회가 성장하도록 도시재생에 필요한 서비스를 단계별, 성격별로 더욱 세분화하여 촘촘한 서비스 관계망이 구축되도록 지역사회통합 돌봄 사업을 펼쳐가야 합니다.

첫째, 탈시설화의 방향성은 “시설퇴소 지원” 과 “시설입소 예방” 을 지향하는 두 개의 축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탈시설의 당면 과제는 거주시설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지만 동시에 재가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계획도 함께 담아가야 합니다. 현재 생활하고 있는 거주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탈시설 주거전환서비스 지원을 준비하는 과정 또한 달라야 합니다. 시설생활이나 부모가정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에게 개인의 사생활권과 자유권 행복추구권이 보장되는 독립된 주거환경이 필요합니다. 이는 장애 당사자나 보호자에게 돌봄 부담을 가중시키거나 가족과의 결별을 뜻하는 게 아니며 오히려 독립적인 주거환경에서 지속적인 상호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 지역사회 자립지원사업은 지역사회 안에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가 365일 지원되도록 지역내 자원기관간의 서비스 지원 협업체계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서비스 지원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도 사회적 입원을 하게 해선 안 됩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익숙하고 친근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역사회 자립지원사업의 본질이요 진정한 지역사회통합 돌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통합 지원주택 모델은 ‘Living Care’ 에서 ‘Life Design’ 서비스로 도약하는 것입니다. 장애로 인해 겪는 불편함 힘듦, 어려움을 살피고 해결해주어 장애 당사자 뿐 아니라 그 가족들의 삶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서비스 대상은 장애 당사자, 부모, 형제자매, 가족, 이웃 주민, 지역사회 등으로 세분화하여 ‘장애로 불편한 것’ 과 ‘사람으로서 필요로 하는 것’ 이 무엇인가를 찾아 필요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장애인만이 아니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말고 개인의 전생애 주기에 따라 삶에 필요로 하는 서비스 지원과 도시재생활을 위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함이 지역사회통합돌봄으로 가는 길입니다.

미래환경창조 패러다임 주창자/창조자인 연세대학교 이연숙 명예특임교수는 “주택이 지역사회통합돌봄 서비스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게 설계해야” 하며 “주민 모두가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이 필요하다” 고 합니다. 지역사회통합돌봄에는 안심. 안전. 안정. 동참. 이 4가지 요소는 장애 당사자들과 그 가족이 독립생활을 하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사회서비스의 중심입니다. 장애 당사자들이 자주권을 가지고 지역주민이 되기 위해서는 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심리·정서적 안심과 ② 안식처와 사회서비스망이 촘촘하게 구성되어 안전하고 ③ 사회보장과 일자리 연계 등 자립생계가 유지되는 경제적 안정 속에서 ④ 사회문화 활동 참여와 동참이 상호조화가 잘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장애인 지원주택사업의 개념과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개인의 사생활과 자율성과 주체성이 보장되는 독립된 공간이 입주자 본인 명의로 계약이 체결된 주택 ② 주거취약계층 누구나 경제적 부담감 없이 입주 가능한 수준의 저렴한 비용의 주택 ③ 독립생활에 저해되는 어려움과 불편함을 해소하도록 생활서비스가 지원되는 주택 ④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사회문화적 활동을 지원하는 종합복지서비스 전달시스템을 지원하는 커뮤니티 환경시스템이 함께하는 주택입니다.

지원주택모델 서비스는 ① 주택지원 ② 가사지원 ③ 사회지원 ④ 문화지원 ⑤ 보건지원 이상의 5가지 성격이 하나로 융합된 사회서비스 지원체계가 사회적 배려대상인 이들을 치유하고 회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사회인으로 정착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장애를 가진 분이 보호 대상에서 행복한 삶의 주권자로서 인정되고 이를 위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삶의 기반이 되는 개인주택을 최우선으로 제공하고 건강한 지역주민으로서의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종합복지서비스 지원과 도시재생활을 도모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사업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역적 안배, 운영센터 규모, 전문인력 배치 등 구조화가 된 사회통합 지원주택모델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3. 복지실천현장에서 바라보는 시범사업 당면 과제는

인천광역시에서는 이러한 탈시설 추진 이념을 세우고 보건복지부 탈시설 시범사업을 완수하기 위해 일련의 방향성과 단계별 계획 진행을 염두에 두고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준비과정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의 성과가 어떻게 되느냐?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면서 궁금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시범사업의 성과를 궁금해하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기뻐움을 보여드리기에는 시기상조라 하겠습니다. 사회현상이 아닌 시범사업에 초점을 맞춘다면 신규사업을 했다고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가 원하는 성과는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히려 결과보다는 장애 당사자와 그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으로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사회현실을 직시하고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 시점에 그들이 겪는 불편함과 어려움에 대한 구체적인 요소들을 찾아내고 그 욕구를 해결하는 것이 탈시설 추진정책의 주요한 핵심이라고 볼 때, 그것이 어떤 방식이나 형태로든지 시도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탈시설화 지역사회통합 돌봄 정책의 성공적인 첫단계를 위해서 복지실천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험을 중심으로 우선적 고려되어야 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 1) **탈시설의 기초가 되고 시발점이 되는 장애 당사자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을 담은 장애인 지원주택 공급과 수요를 고려하여 탈시설의 시작점이 되는 지원주택 공급이 먼저 자리매김하도록 해야 합니다. 즉, 단순한 주택의 제공이 아닌 도시재생활성화의 기반이 되도록 ‘시간’ 과 ‘공간’ 과 ‘인간’ 이 함께 관계가 조성되는 커뮤니티 환경시스템을 조성해야 합니다.
- 2) 새로운 환경에 따라 새롭게 개발되어야 할 사업의 시작은 여러모로 매우 중요합니다. **탈시설 자립지원 대상을 시설퇴소자 뿐 아니라 재가대상자도 시설입소의 예방적 차원에서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탈시설 대상 자격을 시설퇴소자만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탈시설화 정책의 성공적 완성을 앞당기고자 한다면 대상을 두 개의 축으로 구분하여 동시에 시도 해야 합니다. 시설입소 예방적 차원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현재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것입니다.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분들을 발굴함에 있어 시설입소생활자와 재가생활자를 구분하여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기획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 재가에서 장애로 인해 불편하고 힘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고 단계별 추진 실행계획도 수립해야 합니다.
- 3)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장애로 개인의 삶에 필요한 사회서비스가 무엇인가?에 대한 사회서비스 도구 개발을 위한 연구가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막연하게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서 탈시설을 반대하기 보다는 지금 당장 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생각한다면 장애로 인해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가 무엇인가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서비스 범주는 물리적 환경 요소와 사회적 환경 요소를 나누어 볼 수 있는데, ① 물리적 환경 요소는 생활할 수 있는 공간 즉 개인독립주택입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중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 수립과 경제적 여건이 되는 분들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개발도 고려해야 합니다. ② 사회적 환경 요소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지만 그중 제일 우선되어야 할 것은 휴먼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환경 요소는 휴먼서비스로 시작되며, 휴먼서비스의 기초는 경제적 상황을 배제한 장애로 인한 생활이 불편한 모든 분들을 위한 서비스여야 합니다. 장애의 경중에 따른 분류가 아닌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 전문인력이 배치되어야 하고 그 배치 규모 또한 적합해야 합니다.

- 4) 마지막으로 지역사회통합 돌봄이라 하면 365일 서비스 지원을 해야하는 고도화된 근무난이도가 충분히 고려된 새로운 사업의 가치와 중요도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사업구조가 되도록 사업 성격과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탈시설 시범사업이 사회적 직·간접 생산성 비용 효과에 비해 사업 투자 비용이 매우 적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탈시설로 얻게 되는 사회적 경제적 기대환경을 생각한다면 현재의 사업예산과 규모로는 비효율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사회복지분야도 이노베이션 엔진 차원에서 바라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더 가치 있는 걸 발견하면 덜 가치 있는 걸 버려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시각차이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찾는 진정성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토 론: 탈시설 시범사업 종합적 검토와 과제

김기룡 || 중부대학교 교수

1. 지난 해 발표된 로드맵에 대한 의견

-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이하 로드맵)이 발표된지 1년이 되는 시점에서 그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소중한 토론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지난 해 발표된 로드맵은 관련 법령이 미비하고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표되었으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발표된 최초의 탈시설 지원 계획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시도였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한적으로 추진되었던 탈시설 정책이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이 로드맵은 시설 폐쇄 원칙 미제시, 당장 실행 가능한 집중서비스, 대안 서비스에 대한 내용 미비, 지역사회 내 24시간 지원 체계에 대한 구체적 지원 내용 부재, 다양한 주거 모델에 미제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적 탈시설 전달체계 구축 계획 부재, 후견인 지원에 대한 대책 미흡, 탈시설 지원 및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배치 계획 부재, 시설 내 거주인 감소에 따른 기존 시설 종사자의 인적자원 활용 또는 재취업 대책 미흡, 자금 확보 또는 재원 마련 등에 관한 계획 부재, 탈시설 준비부터 정착에 이르기까지의 국가 차원의 통계 자료 수집/연구 개발 계획 부재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 또한 이 로드맵에는 시범운영을 3년간 시행한 후 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데, 앞으로 20년간 탈시설을 지원해도 여전히 시설이 존재할 수밖에 없도록 설계하는 등 완전한 탈시설을 시도한 정책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상당수 발견되었습니다.
- 다소 아쉬움은 있었지만, 중앙정부 차원의 최초의 탈시설 정책이라는 점, 관련 법령이 제·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획·추진된 계획이라는 점, 거주시설의 반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탈시설에 대한 소극적 의지 등 탈시설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등 유발 가능성과 탈시설 지원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의 준비가 충분히 되지 못한 현실 등을 고려해 본다면 매우 진일보한 접근이라 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최근 여당에서 탈시설을 반대하는 단체의 목소리를 적극 경청하며 이들 단체의 목소리를 이유로 지난 해 최혜영의원실에서 대표발의한 탈시설지원법안을 사실상 보이콧하는 실정입니다. 국제 사회의 기준이 되고,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핵심 키워드가 되어 왔던 탈시설 권리는 탈시설지원법 제정으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탈시설 권리 보장을 향한 경로가 그리 순탄하게 그려질 것 같지 않습니다. 특히 여당의 탈시설에 대한 반대 또는 유보적인 입장은 보건복지부가 전향적으로 추진하려 했던 탈시설 로드맵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탈시설 로드맵 추진 1주년을 맞이한 이번 토론회는 일부 반대 목소리 때문에, 여당의 공세 때문에 자칫 소리소문없이 사라져버릴지도 모르는 탈시설 로드맵을 다시 한 번 우리 사회에 환기시켜주고, 국회와 정부가 탈시설 추진에 대한 의지와 열정을 재장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2. 탈시설 로드맵 1주년 동안의 변화와 과제

- 발표 자료를 살펴보니 지난 1년간 탈시설 로드맵의 이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시범사업 시행 첫 해이므로, 시범사업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시범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하며, 시범사업 수행기관과 함께 앞으로 3년간 사업을 어떻게 수행해 나갈 것인지 협의하고, 시범사업 수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지난 해 발표된 로드맵은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사회 현실을 고려하고, 사업수행기관과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일부 수정, 보완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거주시설의 체험홈과의 연계 방안을 시범사업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거주시설 입소대기자도 자립지원조사를 통해 자립 의사를 밝히면 이번 시범사업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등 탈시설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로드맵이 수정·보완되었습니다.

- 시범사업 1차년도는 자립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도입기로 탈시설을 원하는 장애인을 발굴하고, 이들에게 지역사회 내 자립지원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 자원을 연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해 시범사업 수행 지역과 수행기관을 선정하였고, 각 수행기관은 현재 자립지원 전담인력을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후에는 자립지원 전담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하반기부터 거주시설 장애인 및 입소 대기자를 대상으로 자립지원 대상자 발굴과 함께 자립에 필요한 지원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이미 탈시설 지원 절차를 수행한 경험이 있거나, 지역사회 내 공적 서비스와 민간 서비스를 지원,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잘 갖추고 있는 지역과 사업수행기관은 그동안 해왔던 방식대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면 되겠지만, 탈시설 지원에 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지 않는 지자체 또는 사업수행기관은 이 시범사업을 어떻게 수행해 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1차년도에는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지원 경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자립지원 경로는 시설에서 탈시설을 준비하는 단계, 탈시설을 위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전환 단계, 계획에 따라 지역사회 내 거주지로 이전하여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을 실천하는 정착 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 자립지원 준비 단계는 시설 거주 장애인의 퇴소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 퇴소 의사를 파악하기 어려울 경우 시설 거주 장애인이 어떠한 공간과 활동을 선호하는지 확인하는 과정, 시설 거주 장애인의 선호 활동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인 의사를 확인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며, 주변 사람들의 의견 또는 관찰 결과를 파악하는 등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생활하는 시설이 거주시설 최소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해당 거주시설에서 거주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설 밖으로 나와 생활하는 것에 대해 안내하거나 지속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자립지원 준비 단계에서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또한 거주시설 장애인의 특성과 요구가 모두 다를 것이므로 지금 제시하는 것보다 자립지원 준비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이미 이런 과정에 대한 노

하위를 갖고 있는 곳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곳은 준비 단계에서부터 커다란 도전이 될 것입니다.

- 비록 늦었지만 1차년도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는 탈시설 지원 경로를 설계하고, 단계별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여야 하고, 어떠한 점을 유의하여야 하며, 해당 단계의 이행 수준을 누가, 언제, 어떻게 점검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 또는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탈시설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전환 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탈시설을 원하는 장애인 개인의 특성과 요구, 강점, 선호활동, 관심사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실제 지역사회로 나오게 되었을 때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종류, 지원 빈도(지원 강도), 지원 방식 등을 파악하는 방법, 지역사회 내 지원 가능한 공적 서비스와 민간서비스의 종류·제공가능기관·제공가능기간·제공가능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등이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별전환계획 또는 개인별탈시설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정보가 사전에 수집되지 않고서는 이러한 계획이 무의미한 시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정착 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사회에 정착하려면 지역사회 내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 조정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가 있어야 하며, 현재 시범사업 수행기관에 배치될 자립지원 전담인력이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겠지만, 지역사회 내 수많은 공적 서비스 또는 민간 서비스 중계·제공기관의 서비스와 연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제공되지 않고서는 이러한 역할 수행이 어려울 것입니다. 자립지원 전담인력의 구체적인 역할과 권한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기존 지역사회 내 공적 사례관리 지원 체계 또는 민간 사례관리 지원 체계와 어떻게 연계, 조정, 협력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시범사업 초기이므로, 아직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탈시설 지원 과정은 초기에 다양한 자원을 집중하여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촘촘하고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계획의 이행 과정을 잘 점검하고 계획을 잘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시범사업 1차년도 시기에 자립지원 경로에 따른 단계별 지원 가이드라인 또는 매뉴얼을 개발,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진할 자립지원 전담인력에 대한 교육에도 이와 같은 매뉴얼에 대한 교육도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3. 실질적인 탈시설 지원 내용 반영 필요

- 시범사업 실시 기간 동안 저는 이 사업이 완전한 탈시설 지원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랐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마련하고, 주거유지서비스와 활동지원서비스를 잘 구분하여 지원할 것과 직업획득, 주간활동 또는 평생교육 등의 낮 시간 활동 참여, 의사소통과 행동지원 및 의료건강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공적 영역 내에 집중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도 함께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 그러나 현재 시범사업은 탈시설 추진에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인 주택 제공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역할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임대주택 등을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제공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1차년도 시범사업에 참여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당장 확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이 사실상 없을 것이며, 자립지원 대상자의 탈시설 지원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예산을 투입하여 매입임대주택 등을 제공해야만 합니다. 때문에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가 탈시설 지원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지원 중 하나인 주택을 확보하지 못해 탈시설 지원 절차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 시범사업 기간 동안 주택 확보 방식에 대해서는 다양한 옵션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만 그 책임을 다하도록 방관하지 않고 중앙정부가 나서 해당 지역에 공공주택을 직접 공급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주거급여이외에 실제 주택 임차비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확보하여 지방자치단체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주택 확보 이외에도 주거유지서비스와 활동지원서비스 간 모호한 기능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여야 하고, 자립지원 대상 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서비스를 필요한만큼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는 특례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충분한 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가 뒷받침되어야만 주거유지서비스가 주택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서비스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자립지원 대상 장애인 대다수는 발달장애인입니다.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의 의사를 정확히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들 발달장애인의 퇴소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고, 탈시설에 대한

정보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등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의사소통 지원 또는 조력 방안과 읽고 이해하기 쉬운 정보 제작과 제공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4. 탈시설 지원 법령 제·개정 추진 필요

- 로드맵이 발표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탈시설 반대 목소리로 인해 로드맵이 당초 계획보다 축소되거나 왜곡된 방식으로 추진되지는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탈시설지원법안 입법 과정에서 확인된 정부, 여당 그리고 시설 유지를 옹호하는 단체와 사람들의 주장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미 유엔이, 많은 복지국가가, 그리고 탈시설 권리 보장을 위해 투쟁하는 많은 사람들이 탈시설 권리는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라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 이러한 탈시설 권리를 명확히 확인하는 과정이 탈시설지원법 등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로드맵과 시범사업이 탄력을 받고 당초 계획보다 더 탄탄하고 촘촘하게 추진되려면 관련 법령이 명확히 존재해야 합니다. 시범사업은 전국 10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공적 지원 체계는 중앙정부 산하의 지원센터 1곳뿐입니다. 시범사업 수행기관이 계획대로 탈시설 지원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적 지원 체계가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공공주택 등 우선 지원 등을 보장하려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추진 의지도 중요하지만 이를 권리로서 보장하는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 로드맵에 따른 이번 시범사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수정·보완되어 본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탈시설지원법 제정 등 관련 법령 제·개정을 위해 힘을 모을 필요도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가 시범사업 기간 동안 관련 법령 제·개정에도 적극 나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토 론: 탈시설 시범사업 주택 공급현황과 과제

김부병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사무관

토 론: 탈시설 시범사업 현황

서해정 ||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팀장

MEMO

MEMO

MEMO

MEMO
